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9년 7월 6일(월)에 배포되었습니다.

---

**“다문화시대, 다자간 협력통해 사회통합 모색한다”**

- “아시아 지역의 이주와 사회통합(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Asia)”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개최
-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간의 공존 방안 모색 계기 되길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9년 7월 6일(월)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info@kwdimail.re.kr](mailto:info@kw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 하에 오는 7월 8일(수) 오후 1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 지역의 이주와 사회통합(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Asia)”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제심포지엄] 아시아 지역의 이주와 사회통합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Asia)” 개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 시: 2009. 7. 8(수) 오후 13:00-17:30</li><li>□ 장 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li><li>□ 주 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li><li>□ 후 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li></ul>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 하에 오는 7월 8일(수) 오후 1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 지역의 이주와 사회통합(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Asia)”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다문화시대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생활 곳곳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말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이르면서 그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도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을 강조하던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인종을 수용하고, 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문화·다민족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협동연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진행해왔고, 이번 3차 년도에는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이 협동 연구의 일환으로 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 국가의 이주관련 정책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대만, 일본의 다문화 전문가들이 함께 각국의 실행하고 있는 이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 네트워크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브레마 마티아파라남 ASEAN지역 인권을 위한 싱가포르 워킹그룹 MARUAH 의장(Braema Mathiapparanam)이 “싱가포르에서의 이민”을 주제로,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다문화사회 형성에 따른 정책추진 체계 구축방안: 한국적 모델의 탐색”을 주제로, 오다기리 마사타케 일본 가와사키시청 교육위원회 평생학습부 사회교육진흥담당 주임(Odagiri Masatake)이 “일본의 이주와 사회통합: Bottom-up방식 운동과 정책개발”을 주제로, 카오 슈칭 대만 자이대학교 가족 교육 및 상담 연구소 교수 (Kao Shu-Ching)가 “대만에서의 이민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1. 발표자 소개 및 발표요약본

붙임 2. 프로그램 순서

## 붙임 1. 발표자 소개 및 발표요약본

### 발표 1

#### 싱가포르에서의 이민((Im)migration in Singapore)

브레마 마티아파라남 (Braema Mathiaparanam)

#### □ 발표자 소개

마티아파라남씨는 NGO 활동가로서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많은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주자, 여성, HIV, 인권 등의 주제와 관련된 NGO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ASEAN 지역 인권을 위한 싱가포르 워킹 그룹인 MARUAH(Singapore Working Group for ASEAN Human Rights Mechanism)의 의장이다. 싱가포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옹호하는 NGO인, 'Transient Workers Count Too'를 설립하였으며, 이 단체의 초대 회장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여성 NGO인 '연구와 실천을 위한 여성연합' (the Association of Women for Action and Research, AWARE)의 CEDAW 위원회 의장이자, 그리고 '에이즈를 위한 행동그룹(Action for Aids)'의 부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MARUAH는 싱가포르 공식언어인 말레이어로 '존엄(DIGNITY)'을 의미하며, 동남아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연합단체의 싱가포르 워킹그룹이다. 주요 업무는 1) 인권 교육, 2) 싱가포르 내에서 ASEAN 지역에 대한 인권 인식 고취 3) 싱가포르 정부, 민간 단체, 대중들과의 소통 4) ASEAN지역 인권 그룹과 다른 국가 워킹그룹간의 교량 역할 5) 인권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Working Group for an ASEAN Human Rights Mechanism은 초기 창립 멤버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워킹그룹과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 이후 이 지역에서의 인권개선과 인권취약그룹에 대한 모니터링, 인권개선 제안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사, 저널리스트, 연구자이기도 한 마리아타파라남씨는 난양기술대학(Nanyang Technology University)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흑인 여성작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http://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의 문학작품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동남아시아연구소 초빙 연구원 시절, 젠더연구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그 후 이주와 젠더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해 오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복지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의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의장이다.

## □ 발표 요지

싱가포르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아시아지역에서 주요 외국인노동력 유입국으로 등장하였다. 싱가포르에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는 싱가포르 노동시장에 완전히 흡수하고자 하는 고숙련 외국 전문인력 그룹과, 가사노동, 건설,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반숙련,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그룹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젊은 노동력 인구가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공업국가 모두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노동력 이주는 송출국이 실업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송출금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보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에서 ‘외국 전문인력’의 경우 싱가포르 시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에서도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반면 노동허가를 받고 일하는 반숙련,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수도 상당하다. 오늘날 4백 5십만 싱가포르 인구 4명중 한 명은 외국인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싱가포르의 인구 구성은 싱가포르인이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다.

싱가포르에서 모든 사람들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외국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법적인 차별은 거의 없다.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외국인력고용법 the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주와 직업이 명시된 노동허가를 소지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 노동조건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용주가 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의료보험 역시 최근에 들어서야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무 사항이 되었다. 이 밖에 「작업장안전과건강법(Th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노동자보상법(the Workmen's Compensation Act)」, 「고용중개업 법(The Employment Agency Act)」 등을 통해 노동 조건과 중개업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법(Employment Act)」 혹은 「외국인력고용법(the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의 대상이 아니다.

통합(integration)은 분명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시민과 외국인들이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고, 모든 공동체가 그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전제한다. 특히 종교적 신념과 종속성이 다양한 그룹들끼리의 상호작용은 싱가포르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통합의 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통합은 고립된 관점으로 다루어지는 안 되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모든 당사자들의 관점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지역사회와의 어울림을 통해서 통합을 실천하거나, 예술, 인터넷 상의 가상 공간을 활용하여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싱가포르에서의 통합정책은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에 대해 분명하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리고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경우 현재 통합의 관점에서 관심을 적게 받고 있지만 이들 그룹은 통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를 아우르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발표 2

### 다문화사회 형성에 따른 정책추진체계 구축방안: 한국적 모델의 탐색

#### (A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n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The Case of Korea)

한승준 (Seung-Jun Han)

#### □ 발표자 소개

한승준 교수는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1997년 프랑스 파리제1대학(Panthéon-Sorbonne)에서 도시행정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후 정책과 행정학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 발표 요지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특징은 첫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율은 1995년 0.27%에서 2008년의 1.8%로 상당히 늘어났지만 다른 세계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이민자의 출신국가가 대부분 주변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노동자 유입과

결혼이민자 유입 모두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다. 셋째, 농어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정책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동화주의 정책을 지향하게 된다. 넷째, 현재에도 우리나라 정부와 내국인들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그 특성상 영역별로는 법무, 노동, 교육, 복지, 경제, 문화, 노동, 농림 등의 영역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주체별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상호 작용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분야이다. 그러다보니 중앙부처간, 중앙-지자체간,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앙-지자체-민간 간 역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간의 역할분담과 협력 및 상호작용이 다문화정책의 추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http://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우리나라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추진체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도 전체 지자체 사업 586개 중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 사업이 523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중앙정부가 수행해 왔던 서비스 전달기관의 지자체 이양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동안 부처별로 구축한 기존 서비스 전달기관들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 전달기관 지정권 이양과 지역 내 전달기관 간 차등적 예산배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도 외국인정책의 년도별 예산 총액 뿐만 아니라 지방비의 비중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방적 이민허용과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투자규모의 9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의 강조점이 점차 사회통합과 인권보호에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내적 통합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판단된다.

이주와 외국인 정책의 역사, 외국인정책의 방향, 다문화정책 추진체계를 근거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다문화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이다:

첫째,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조정체계를 통한 다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 확보, 둘째,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 셋째, 지역차원에서의 추진체계 정비, 넷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명확한 업무분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담부서의 설립 및 다문화지원협의체의 구성이다.



## 발표 3

### 일본의 이주와 사회통합: Bottom-up 방식 운동과 정책개발

####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Japan: Bottom-up Movement and Policy Making)

오다기리 마사타케 (Odagiri Masatake)

#### □ 발표자 소개

오다기리씨는 현재 일본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부에서 사회교육진흥담당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릿쿄대학교 경제학부 경영학과 졸업 후 민간기업 및 사회복지법인을 거쳐 1993년 가와사키시청에 취직, 마을 만들기,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 등을 담당하고 있다. 1999년에는 부천시청 국제통상과에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이 경험을 2006년 호세이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역에서부터의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정 분석: 가와사키시와 부천시의 연계사례」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전시켰다. 2006년 같은 대학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지자체 국제정책(국제 교류 및 국제협력, 다문화 공생), 한국 연구, 사회교육시설연구 등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강희대부천시민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일본 '이민정책학회(감사)', '국제개발학회', '일본사회교육학회', '일본평화학회'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일한 이문화교육 위칭』(2002, 공동집필, 사회평론사), 『한국의 사회교육, 평생학습: 시민사회 창조를 향하여』(2006, 공동집필, 에이델연구소)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가와사키시 다문화공생사회 추진지침: 부산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참고 의견」(2009,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법조논집』 제3호) 등이 있다.

#### □ 발표 요지

일본사회의 다문화화는 근대화 과정과 글로벌화 과정에서 형성된 다층성을 특징으로 한다. 내부 식민화 과정에서 다문화의 주체가 된 류큐 민족과 아이누 민족, 외부 식민화 과정에서 발생한 '올드커머', 그리고 고도 경제 성장기에 등장한 '뉴커머'가 일본의 다문화화 과정의 3대 주체이다.

1990년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기존의 사회통합정책의 동화주의에 국적법상의 혈통주의를 결합시킨 것으로써, 일본사회의 다문화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불법체류 혹은 '초과 체류자(over-stay)'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정주외국인 중심의 생활보호제도 등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강력한 출입국관리정책에 비해 사회통합적인 다문화공생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처음으로 시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http://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도한 것은 2006년이다. 그해 12월, 중앙정부는 <'생활자'로서의 외국인 문제에 관한 종합 대응책(이하 대응책)>을 발표하였다. '생활자'라는 개념은 그때까지 '노동자'나 '범죄자'로만 간주되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사용되었다. <대응책>은 행정서비스, 교육, 고용, 재류관리의 4개 분야로 나뉘는데, '다문화공생'은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정책에 한해서 쓰고 있다.

<대응책>은 30여년 간 일본의 지방자치운동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960년대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사회당과 공산당이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이 선출되면서 '혁신지자체운동'이 전개되었다. 혁신지자체 운동은 상위법에 앞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경, 의료, 복지, 시민참여 등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정책을 실시해 나갔다. 1990년대 들어서 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을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내고, 2000년대 들어서는 주로 뉴 커머들이 모여 있는 이른바 '국제형 지자체'들이 2005년부터 총무성 다문화공생연구회에 참가하였고, 그 성과를 모아 2006년에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다문화공생추진플랜>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정책의 시행주체 문제이다. 따라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 내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영역간의 네트워크 및 협력체제도 중요하다. 가와사키시의 '가와사키구 커뮤니벌러 (Communication Volunteer)'는 사회통합 거버넌스 구조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이다. 가와사키구 커뮤니벌러는 평생학습과(lifelong learning)과 다문화소셜워커(multicultural social worker)를 중심으로 이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사업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의제설정, 2)정책장성, 3)정책결정, 4)정책집행, 5)정책평가 이 모든 정책과정에 이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발표 4

### 대만에서의 이민과 사회통합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Taiwan)

카오 슈칭(Kao Shu-Ching)

#### □ 발표자 소개

카오 교수는 현재 대만 차이(Chia-Yi) 대학교의 조교수로 '가족 교육 및 상담 연구소'에서 가족 교육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대만 보통 대학(Normal University)에서 심리교육과 상담 학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1999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노동, 공동체, 가족 교육 (Work, Community and Family Education)'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9년부터 차이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가족 내 상담과 교육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대만에서 외국인 신부의 등장을 가족 교육과 공동체, 정책의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Kao, S. (2004). The phenomenon of foreign-bride in Taiwan and its implications for family education in community and policy.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105, 150-158. 【In Chinese】)을 비롯하여, 신규 이민자 여성과 그 자녀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교육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문(Kao, S. (2005). Reflecting on the educational problems and resources for the new immigrant females and their children. New Horizon Bimonthly For Teachers, 135, 26-34. 【In Chinese】)을 발표 하였다. 최근에는 대만, 홍콩, 중국의 가족 교육에서 문화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 발표 요지

대만은 1999년 이후 동남아시아의 신규 이민자 유입과 더불어 1999년 5월 21일 「입출국 및 이민법」(immigration act)이 공포되어, 대만 내정부(內政部) 산하에 입출국 및 이민업무를 전담하는 「입출국 및 이민서」(national immigration agency, 이하 '이민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1월 2일 정식으로 이민서가 설립되어 통합적인 이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만 내 외국인 배우자는 이미 40만 명에 이르며, 중국 본토 출신 여성이 265,989명으로 제일 많고, 그 뒤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마카오, 태국, 필리핀 등의 출신국 여성들이 잇고 있다. 이민서(移民署)의 외국인배우자 지원 정책 기조는 '신규 이민자의 융합,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 건설'이며, '사회적 지원과 보호'의 관점에서 새로운 이민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의 인권보장을 주요 설립취지로 하며, ① 외국어에 능통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http://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한 각 분야 전문 인력 유치, ② 정부와 민간 사회 자원의 통합, ③ 출입국 인원의 관리 강화, ④ 신규 이민자 지도 시스템 통합, ⑤ 이민 문제 관련 전문가 위원회의 참여 유도 등의 비전을 갖고 외국인 배우자의 욕구충족과 권익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관련 연구와 정책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이민연구센터’가 2007년 10월에 완공되어 민간역량 통합을 통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만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이민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신규이민자 가정의 유지를 돕고, 사회안정 촉진, 국내 인력자원 양성, 국가 이미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 대상 서비스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대만에서의 생활권 보장, 외국인 배우자 자녀에 대한 종합지원, 상담 네트워크 운영, 이민서 산하 25개 지원센터에 이민자 지도담당자를 배치하여 외국인 배우자 서비스의 통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원화된 사회 건설, 정부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통합에 노력하고 있다. 2005년 「외국인배우자지원지도기금」을 설립하여 정부 및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도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및 중국본토 출신 배우자 대상 지원지도조치 시행현황」에서 보듯이 각종 주요 사업의 세부조치에 있어 중앙정부가 각급 정부기관 및 부처의 관련 업무를 근거로 주무기관 및 협력기관을 상세하게 지정하여, 각종 조치별로 주무기관과 협력기관의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각급 정부기관 및 민간기구의 연계망 구축하기 위하여 전산화 및 네트워크화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민서의 각종 업무 역시 이민서 산하 전국 각지의 지원센터와 관련 기관에 정보화 설비를 설치하여 네트워크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신속 편리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도 24시간 개방형 이민서 글로벌정보망을 제공하여 일반 대중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민서의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규 이민자 관련 지도업무에서는 자원망 구축 흐름과 다양한 조직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민 관련 업무의 통합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connection), 협력(cooperation)관계를 통해 지방과 중앙정부 자원을 통합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인력그룹간의 협동(collaboration)추진을 통해 전국 각 현 및 시 차원에서 이민지도방안을 수행한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규이민자의 적응 뿐 아니라 대만 국민들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 대만 국민들이 지역사회행사에 참여하여 다원적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 설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대만 내 각 종족이 서로 화합하고 상호 인정하게 되면서 다원적 문화에 대해 상호존중(respect), 화합공생(reconcile), 상호신뢰(rapport)하는 3R태도를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별첨 2. 프로그램 순서

13:00 - 13:30	등록
13:30 - 13:40	<u>환영사</u> 김태현 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u>사회</u> 변화순 실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
13:40 - 14:30	<u>발표 1</u> 싱가포르에서의 이민 발표: 브레마 마티아파라남 의장(Braema Mathiapparanam, ASEAN지역 인권을 위한 싱가포르 워킹그룹 MARUAH)
	<u>토론</u> 장세근 과장(법무부 사회통합과) 이선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30 - 15:20	<u>발표 2</u> 다문화사회 형성에 따른 정책추진체계 구축방안: 한국적 모델의 탐색 발표: 한승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u>토론</u> 오다기리 마사타케 주임(Odagiri Masatake, 일본 가와사키시청 교육위원회 평생학습부 사회교육진흥담당) 이혜경 교수(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15:20 - 15:30	휴식
15:30 - 16:20	<u>발표 3</u> 일본의 이주와 사회통합: Bottom-up방식 운동과 정책개발 발표: 오다기리 마사타케 주임(Odagiri Masatake, 일본 가와사키시청 교육위원회 평생학습부 사회교육진흥담당)
	<u>토론</u> 이민원 과장(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민무숙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20 - 17:10	<u>발표 4</u> 대만에서의 이민과 사회통합 카오 슈칭 교수(Kao Shu-Ching, 대만 자이대학교 가족 교육 및 상담 연구소)
	<u>토론</u> 김현미 교수(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정준호 조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부)
17:10 - 17:30	종합토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http://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